

장중 5000선 탈썩… 외국인 매도 폭탄에 코스피 5% 급락

6000선 간신히 지켜…코스닥 12%대 하락 충격

중국 D램 추격·AI 수익성 우려에 반도체주 고전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반도체주 급락에 휘청였다. 코스피는 6% 가까이 떨어지며 6000선을 간신히 지켰고, 장중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등 시장 전반에 투매 분위기가 확산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8.89p(5.46%) 내린 6035.35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8월 19일 5.80% 하락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98.16p(3.10%) 하락한 6186.08로 출발한 뒤 낙폭

을 확대했다. 장중 한때 5911.11까지 밀리며 60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코스피가 6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7월 3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오전 9시47분에는 코스피200 선물지수 급락으로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지난 8월 19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홀로 4조5157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조6882억원, 2조 2321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분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7.39%)와 SK하이닉스(-10.09%)가 동반 급락한 가운데 삼성전자(-6.69%), SK스퀘어(-12.91%), 삼성전기(-8.34%)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이 밖에도 현대차(-

1.56%), KB금융(-0.25%), 삼성생명(-4.30%) 등이 하락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02%)과 삼성바이오로직스(0.42%)는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3%(12.16p) 내린 837.03에 장을 마감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82억원, 431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홀로 1909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다. 알테오젠(-3.02%), 에코프로비엠(-2.08%), 레인보우로보틱스(-1.92%), 원익IPS(-0.38%), 이오테크닉스(-3.33%), HLB(-0.90%), 심텍(-2.84%) 등이 하락했다. 반면 주성엔지나 어림(3.56%), 에코프로(1.31%), 리노공

업(1.92%) 등은 상승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8% 상승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06%, 0.44% 하락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인텔(-3.20%), 마이크론(-3.88%), 브로드컴(-1.88%) 등이 하락했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4.02% 내렸다. 팔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역시 2.67% 하락했다.

미국 증시의 반도체주 약세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기술 추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장기화로 미국 국채의 투자 매력이 커지면서 위험자

산 선호가 악화된 가운데 오픈AI의 매출 관련 논란과 브로드컴·인텔 경영진의 AI 투자 자금 조달 부담 관련 발언 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여기에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새로운 D램 기술을 공개하고 연내 이를 적용한 차세대 서버용 제품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도 커졌다. 이러한 대외 약재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지수 하락 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0원 오른 1345.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일방적 통합 중단…자율·책임·분권 강화를”

전국 항만공사 노조-시민단체, 통합 철회 요구 집담회

전국 4개 항만공사노조와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명은 13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기자회견 및 집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 중단과 자율·책임·분권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항만공사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국가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고 각 지역의 산업·고용·경제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서로 다른 항만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다고 운영 효율성, 국제 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통합 추진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통합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려면 먼저 구체적인 통합 목적과 법적 근거, 경제성 및 공공성 평가, 항만별 영향 분석을 공개해야 하며 항만산업계, 노동조합, 지방정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대안을 비교하는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위원장 은 “정부에 법적 근거, 경제성 평가 등 자료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며 “항만공사와 여러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정부의 졸속통합을 막아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항만공사 통합은 항만경쟁력 저하, 사업 축소, 기능 약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통합이 아닌 자율성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양=김귀진 기자 klgjin@



전국 4개 항만공사노조와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명은 13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기자회견 및 집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 중단과 자율·책임·분권 강화를 촉구했다.

광주은행, 대한조선에 3681만달러 RG 발급

〈선수금환급보증〉

정책금융기관 지원 없이 전액 보증…“생산적 금융 실현”

광주은행이 지역 조선사의 선박 수주를 돕기 위해 선수금을 전액 보증하는 금융 지원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해남군에 소재한 대한조선에 미화 3681만 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증은 15만7000t급 원유운반선 건조계약과 관련한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선박 수주 호조에도 RG 발급 한도 등의 제약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사의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RG는 선주가 조선사에 지급한 선수금

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상품이다. 조선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광주은행이 정책금융기관의 별도 보증 없이 자체 심사를 통해 전액 보증을 발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은행은 대한조선의 재무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건조 이행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에 필요한 금융을 적기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했다.

광주은행은 앞서 대한조선의 수주 선박 3척에 대해서도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해

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대한조선은 이번 RG 발급으로 선박 건조계약 이행에 필요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지역 협력업체의 일감 확대와 고용 창출 등 지역 조선산업 전반에도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RG 발급은 정부의 조선업 지원 기조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주금과 유치 경쟁을 앞두고 지역 산업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상세 의지를 담은 사례”라며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TP-KAIST, 지능형 로봇 육성 협력

기술개발·실증·인력양성·사업화 등 전주기 협력체계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KAIST 공과대학과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로봇 기반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광주의 주력 제조산업과 KAIST의 로봇·인공지능(AI) 연구역량을 연계해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육성, 사업화로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에는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기간산업과 모빌리티·소재부품·식품 등 제조업이 집적돼 있다.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AI·로봇 기반 자동화 전환의 필요성도 커

지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육성을 비롯해 관련 정책과 신규사업 공동 발굴, 로봇 기술의 산업현장 보급·확산,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재직자 교육 등에 협력한다.

특히 전남테크노파크 ICT로봇융합센터가 추진하는 ‘지능형 로봇·퍼지컬 AI 얼라이언스’와 KAIST의 연구역량을 연계해 지역 기업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로봇 기술 실증과 정부 신규사업 공동 기획도 추진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공공주택 짓는다더니…광주 산정지구 주민 재산권 ‘발목’

토지거래허가 지정 5년…지연 관리기준 없어

LH 지구계획 승인 목표 내년 상반기 ‘불투명’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장기화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를 지정했지만 사업 추진과 보상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산정지구는 2021년 3월

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5년 넘게 토지 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LH가 제시한 지구계획 승인 목표 시점도 2027년 상반기로,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일정 행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 거래에도

제약이 따른다. 사업이 장기화할수록 주민들이 토지를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데 겪는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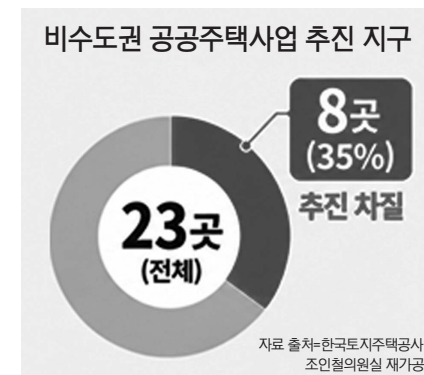
이 같은 문제는 광주 산정지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지구 가운데 8개 지구, 총 5만1060호 규모의 사업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5개 지구는 보상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한 곳도 적지 않다.

창원 태백지구는 2018년 7월 지구 지정 이후 99개월이 지났고, 제주 강령지구도 2018년 12월 지정 이후 94개월이 경과했다. 두 사업 모두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지구는 주택 수요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주 문산지구는 사업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사업성 개선이 어려울 경우 지구 지정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LH는 주택 수요 감소와 건설 원가 상승,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을 별도로 점검하고 정상화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위험관리 지침과 대응 절차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인 사업성 검토와 투자심사는 이뤄지고 있지만, 지연 기간이나 사업성 악화 정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일정 시한 안에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업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가 반복되면서 의사결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인철 의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공주택을 짓겠다며 내 땅에 선을 그어 놓고, 최장 8년이 넘도록 사업 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자기 땅을 마음대로 팔지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연세 보상받을지조차 모르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장기 지연 사업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상화하거나 조정할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8개 지구의 추진 방향과 일정을 주민 앞에 소속히 내놓아야 한다”며 “뭉여 있는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최소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